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2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3면

윤석열
퇴진 운동
6면

국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퇴진 시위 7면
독일 극우의 부상 8~10면
미국 보잉 노동자 파업 12면

우크라이나
전쟁
11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
생활고로 이탈
16, 15면



이스라엘의 확전 노력은 좌절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3면

**이스라엘 군대는
패퇴당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장의 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석권호 씨 등 4명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장기간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속죄양을 만들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은 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해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흘리며 민주노총의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요구 등 정부 비판, 이태원 참사 항의 운동 등을 모두 북한의 지령과 연관된 활동인 것처럼 뒤집어씌웠다. 보안법 공격을 통해 반정부 선동을 위축시키고, 좌파와 노동운동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자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은 이 사건을 폭 잡으며 대공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해 여당 지도부는 “중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라며 민주노총을 모략했다.

최근에 정부·여당은 이런 기조를 더



지난해 1월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윤석열의 보안법 공격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욱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반대한민국 세력(또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도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성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등 보안법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청주지방법원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운동가 3인에게 무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북한과 연계된 간첩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들을 의회와 선거를 지향하는 대다수 좌파가 외면한 가운데, 국가가 터무니없는 중형으로 탄압한 것이다.

청주 평화운동가 중형 선고는 이번에 검찰이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청신호가 됐을 것이다.

이처럼 반미자주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 탄압이 효과를 내면 더 광범한 좌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온건 주류 좌파들은 보안법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 국가와 연계된 간첩 행위는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석권호 씨 등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일각에도 4인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긋거나, ‘민주노총

을 이용했다’며 방어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석권호 씨 등은 북한 지배 관료의 일부가 아니다. 천대받는 남한 노동계급의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녀사냥 대상이 된 것이다.

그들이 단지 북한 관료의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구실을 한 것도 아니다. 한미일 동맹 해체 같은 요구들은 광범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좌파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물론 북한 관료는 남한 좌파가 연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정치적 오류로 여겨지더라도, 누군가가 그 정치적 신념을 타인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다면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했다.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마녀사냥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1월 6일 선고 공판에 맞춰 적어도 하루 총력 파업을 하는 등 방어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김영익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청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승실 씨가 본지에 소식을 보내 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청주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보안법 사건들에서 소위 북한공작원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곽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박승실 본인] 측이 구체적인 신문 사항을 들이대자 곽모 씨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당황해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 태지영이 예정된 증인신문 30~4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증인을 퇴정시켜 버렸다.

이에 피고인 측이 거듭 추가 신문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오히려 소송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 퇴정을 명령했다.

그날 결심 공판을 강행하겠다고 한 재판장은 나를 퇴정시킨 후 꺾석 상태

에서 검사가 구형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규정한 내 최후 진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선 변호인에 의하면 검사는 앞서 따로 재판을 받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선고 일정을 고지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됐다. 보안법 사건 중형 구형과 선고를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몰아 전쟁의 불장난을 시도하려는 매국검찰 독재정권의 검은 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독재정권 탄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과 판사 태지영을 규탄한다!

박승실 청주의 평화운동가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알림 설정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62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용단 폭격

이스라엘의 중동 확산 구탄한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7일 가자 학살을 개시한 이후 가장 강도 높게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다.

9월 23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레바논 전역을 공격했다. 레바논인 492명이 죽었다. 그중에는 어린이가 35명 있었다.

9월 21일에도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시설·설비 400여 개를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38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특히, 헤즈볼라의 군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과 아메드 와비, 헤즈볼라 정예부대 라드완의 간부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관련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바논 국민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닌,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런 이간 시도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로 비난받을 때마다 써먹던 수법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심판의 전투”를 선포했다. 9월 22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의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에 보복 로켓을 발사했다.

헤즈볼라는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과 대량 암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9월 17일과 18일 이스라엘의 삐삐·무전기 테러 공격으로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이래 저강도 전쟁을 벌여 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인 일종의 측면 전쟁으로 레바논인 6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나 삐삐·무전기 테러는 이스라엘이 도발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그리고 부도덕한, 전쟁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가자 전쟁이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뿐 아니라 레바논과 이란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무계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장관 아미차이 치클리는 레바논 남부에 “적 인구가 없는 완충 지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레바논이] 이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7월 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와 테헤란에서 각각 헤즈볼라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와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거의 동시에 암살했다. 그래도 이란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8월 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비교적 관리된 포격전이 있었을 뿐이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그리 되면 이란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이란 지도자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 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는 데 훨씬 관심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레바논 공격은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목표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을 완료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네타냐후는 가자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덮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는 전쟁 목표 달성 실패와 자신의 부패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가자 전쟁을 지속해 왔다.

물론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의 전략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대부

분을 파괴하고 어린이 수천 명을 죽이고 학교와 병원을 파괴했어도 하마스를 제거하지도, 인질들을 데려오지도 못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피난을 간 6만 명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새로운 전쟁 목표”를 추가했다. “우리는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은 정착자들이 북부 지역으로 돌아갈 권리를 구실로 삼아 전쟁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되면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야당과 이스라엘인들도 대체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 ‘반전’ ‘평화’ 시위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숨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확산이 이집트 등 아랍 나라들에서 대중의 반란을 촉발할까 봐 두려워한다(그래서 이집트는 서둘러 레바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그런 반란이 친서방 아랍 정권들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중동 지배가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과의 긴장에 대응해 오히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와 무기 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하려고 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이라도 중동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확산(특히, 이란의 개입)을 막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량 학살을 계속 저지르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와 각종 무기를 지원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관 행세를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사령관 아킬 살해를 “정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패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결국 철통같이 지지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전략을 둘러싼 것이라기보다는 전술과 작전, 책략을 둘러싼 것이다.

김인식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가자 전쟁은 중동으로 확산되는가?

일시 10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편저자

참가비 5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경기/인천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신도림역 2층 기온 대회의실 (신도림역 1호선 지상층 개찰구 앞 4~6번 출구 방향)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공저자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인천 지역 모임들 문의 010-6224-2157 / kyongi@ws.or.kr

가자 인종학살에서 시선을 떼지 말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레바논에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시선이 레바논에 쏠린 틈을 타 가자 인종 학살을 더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그전부터도 미국 등 서방의 가자 전쟁 “레드 라인”은 호지부지됐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교 폭격, 구호 활동가 살해, 구호품 전달 방해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은 지 오래다.

이스라엘군은 9월 21일 가자시티의 알자이툰 소재 피난처인 제이툰 학교를 폭격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인 여성 움 마흐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는 7~8번이나 난민이 됐고, 두 아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9월 22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학교 대피소 두 곳을 폭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최소 10명 죽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대피소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자지구 언론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181곳의 대피소를 폭격했다.

레바논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초점이 옮겨간 틈을 타 가자 인종청소 목표를 달성하려고 더욱 기를 쓸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종 학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많은 세계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인종 학살은 지속되고 있다.

서방 정부들은 가자 인종 학살을 지지하는 바람에 커다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서방 정부들에 가해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인종 학살을 멈추게 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중동 학전 노력을 규탄하는 동시에, 가자 전쟁 반대 운동을 더욱 키워야 한다.

김인식



저격, 독살, 폭발하는 전화기나 자동차, AI 로봇 기관총 등등 ...

‘암살 기계’ 모사드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강탈과 테러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암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악명 높은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다.

9월 17~18일 레바논에서 휴대 전자기기 수천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원격 폭발시킨 잔인한 작전은 바로 이 모사드의 소행임이 틀림없다.(관련 기사 3면)

모사드가 1972년부터 무려 7년간 중동과 유럽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추적해 암살한 ‘신의 분노’ 작전은 유명하다.

그 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검은 9월단’ 수장 알리 하산 살라메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한 자동차 폭탄에 사망했다.

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표 마흐무드 함샤리는 이탈리아 언론인으로 가장해서 접근한 모사드 요원이 몰래 집 전화기에 설치한 폭탄에 다리를 잃었고, 결국 그 부상으로 사망했다.

모사드는 ‘신의 분노’ 작전을 수행하다가 노르웨이에서 한 모로코인 남성을 ‘검은 9월단’ 지도자 중 하나로 착각해, 임신한 아내 앞에서 총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1978년에는 동독에서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PFLP) 지도자 와디 하디드가 독이 든 초콜릿으로 암살당했고, 1987년에는 튀니지에서 PLO 군사 지도자 아부 지하드가 암살당했다.

1995년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자 파티 샤카키가 몰타의 한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았고, 2004년에는 하마스 지도자 엘딘 셰이크 칼릴이 시리아 수도에서 차량 폭탄으로 암살됐다.

모사드의 가장 최근 표적 중 하나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였다. 그는 10월 7일 이스라엘에 굴욕을 안긴 팔레스타인 측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다.

하니예는 지난 7월 말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

식에 참석차 이란의 한 안가에 머물다 암살당했는데, <뉴욕 타임스>는 모사드가 그곳에 원격 조종 폭탄을 심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 사례들은 이스라엘이 저질러 온 ‘암살 잔혹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의 은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모사드가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무법자처럼 날뛰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서방의 은밀한 협조

실제로 2010년에 미국, 영국 정부 등이 모사드의 암살 작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테니스 선수로 위장한 모사드 요원들은 두바이의 한 호텔에 머무르던 하마스 지도자 마흐무드 알 마부흐를 암살했다. 약을 먹여 마비시킨 뒤 감전시키고, 베개로 질식사시켰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호텔 CCTV에 얼굴이 찍혀 발각됐다.

당시 이 26명의 요원들은 여러 서방 국가의 조작된 여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명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피스크의 두바이 취재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여권에는] 홀로그램 사진과 생체인식 정보가 찍혀 있었다. 이건 위조 여권이 아니다. 실제로 등록된 명의를 사용했다.” 미국, 영국 정부 등이 이스라엘에 속기는커녕 이스라엘과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암살 공작 역사는 끔찍한 폭력에 계속해서 의존해야 하는 그 국가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죽음과 파괴를 퍼트리지만 그에 맞서 계속 생겨나는 분노와 저항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김승주

자본주의 국가는(물론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9월 21일 서울 혜화역에 댄페이스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 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 다수는 20~30대 여성이었다. 2018년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항의 시위(“불편한 용기”)가 벌어진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6년 동안]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며, 경찰, 법원,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한 국가 기관들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관련 기사: 본지 웹사이트, ‘댄페이스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여성들(대부분이 노동계급 등 서민층)이 국가 기관들을 규탄해 대규모 대중 행동을 벌이고, 현실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한 번 유포되면 언제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고 무한 재생될 수 있어 피해자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피해 회복은 …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제 신상 정보와 사진, 허위영상물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고, 저는 3년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 수많은 가해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물을 이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떠안고 살아야만 합니다.”(서울대 댄페이스 성범죄 피해자 법정 진술문, 〈한겨레〉에서 재인용)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댄페이스 기술이 상용화돼,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 하나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설사 그 시작이 10대 남성 포레집단의 객기에서 비롯한 장난이었을지라도 그 피해는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수준으로 견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10대 가해자를 엄벌주의로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그 반대로 이 문제를 작은 것으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학업 성취나 교내의 활동 등에서 남성에게 뒤지지 않고 동등한 기대 속에서 자란 오늘날 청년 여성들이 여성의 몸을 한낱 노리개로 여기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문제를 소홀히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한 국가에 항의하는 대규모 여성들의 운동(위 2018년, 아래 2024년)

여기며 방치해 왔다.

201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도 여성들의 항의 덕분이었다. 특히,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이 지탄의 대상이었다.

2015년 ‘소라넷 폐지 운동’을 주도한 여성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해 경찰을 “한남캅(COP)”이라고 조롱했다. 연인원 35만 명이 참가한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도 여성의 피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촉발됐다.

그런데 2024년에도 여성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대와 인하대의 댄페이스 사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와 증거 수집에 나서고 나서야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기소율은 50퍼센트가 안 된다.

혜화역에서 수천 명이 “텔레그램 / 해외서버 / 못 잡는다 / 핑계 마라, / 못 잡는 게 / 아니라 / 안 잡는 거 / 다 들켰다” (공식 구호) 하고 외친 이유다.

수사기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은 93만 건이었는데, 이 중 26만 건(약 30퍼센트)은 삭제되지 않았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삭제 지원이 되는] 구성요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이 탈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적’인 신체 부위가 털 노출돼 있다거나, 피해자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한 것에서 비롯한 피해물이라는 이유로 탈락된다고 한다.

무신경, 무책임

피해자 상담과 피해물 삭제 지원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재정난과 인력난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해 접수는 급증하는 데 반해 지원센터의 인력은 3년째 39명이다(그중 40퍼센트가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14곳의 상담원은 겨우 28명이다. 상담원들은 “피해자를

모두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을 섬세하게 챙기기 어렵다” 하고 호소한다.

이처럼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경찰의 태도와 정부의 인색한 피해자 지원은 우파 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본질에서 비롯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은 평상시 가장 중요한 일부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극소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절대 중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위상은 그 국가와 연계된 자본들의 규모와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이해득실에는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경찰 등 국가 기관은 보통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과 성적 피해에 대해 무신경하다. 특별한 압력이 없다면 그런 일들은 귀찮은 업무 중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들이는 돈은 그토록 아까워하면서 법인세 약 14조 원, 종합부동산세 약 6조 원은 톡 감면해 주는 걸 보라.

이번에도 정부는 댄페이스 성범죄로 혹여라도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아질까 우려한다. 규제가 AI 산업 촉진을 방해할까 봐서다.(현재 국회에는 AI 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AI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의 한 역겨운 증상이다. 그런데 자본가 계급은 여성 차별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여성 차별은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 가족(주로 그 안의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에서 비롯한다. 가족제도는 자본가 계급에게 엄청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이득을 준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수장들이 여성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더 많은 여성을 정치인이나 국가 관료에 올리는 일에 힘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그 국가를 포함함)을 겨냥하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성지현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문성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내에서도 이반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파 지지층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위기 속에서도 연금 개악 방향을 발표하는 등 친기업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시내 한복판에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등장시켰다.

윤석열이 극우 뉴라이트를 중용하고 그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로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항전”을 선동하자, 국가보안법 탄압과 중형 구형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에 대응할 아래로부터의 대규모 저항이 분출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지지율을 소폭 만회하며 공격의 고삐를 계속 쥘 것이다. 경제·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

민주노총과 여러 좌파 단체들은 윤석열퇴진운동본부로 결집해 9월 28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자고 주장한다.

자민통계 인터넷 매체인 <민플러스>는 “9월 28일 퇴진 광장으로” 모이자는 사설(9월 21일)에서 각계약진으로 벌어지던 대정부 투쟁이 “[윤석열] 심판이나 탄핵이나 퇴진이나를 따지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 기치 아래 뭉쳤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크게 모여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이 파업도 한다면 좋을 것이다.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는 식으로 뿔뿔히 떼어놓는 태도를 취하는



기성 경제·정치 시스템에 도전해 뒤흔들지 않으면, 개혁을 제대로 얻어낼 수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

것은 종파주의로 이끌릴 것이다.

그런데 국회 탄핵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퇴진을 목표로 하느냐 사이의 차이는 그 효과 면에서 매우 크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주도하는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은 국회 탄핵(공중전)과 거리 운동(지상전)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일종의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당 의원단은 민주당 탄핵과 의원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가칭)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추진 중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진보당 지역 조직들은 기층 투쟁체들을 건설하고, 9·11·12월에 대규모 동원을 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거리와 국회의 투트랙 전략 일지라도 탄핵을 목표로 한다면 그 중심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전략에서 실제로 윤석열의 퇴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탄핵 절차이기 때문이다.

대중 스스로의 행동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민주당과 동맹하(고 이 동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 된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은 실은 국회 대응을 더 상위에 놓는 ‘이중’ 전략인 것이다.

또, 탄핵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 국가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이 나서고, 국민의힘 일부를 설득하고, 헌법재판관들까지 설득하려면 누가 봐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할 만한 명백한 위헌·위법 사항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이나 건축, 노동 착취, 이태원·해병대원 참사와 같은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는 진짜 중요한 문제들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보다 각종 의혹 찾기를 더 중시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불기소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동맹해 벌이려는 윤석열 퇴진(탄핵) 운동이 “개헌 등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 수립으로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과 ‘개헌’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 것은 기정 정치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절차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셈이다. 국민 탄핵권을 도입하는 개헌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진정한 급진적 대안은 아닌 것이다.

억압적 국가기관들에 타격을 가하며 지배계급을 압박하는 아래로부터의 퇴진 투쟁과 탄핵·개헌 등 헌정 질서를 존중하며 벌이는 운동은 다른 것이다. 헌정 질서는 대중의 압박이 위로 전달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과속 방지턱의 연속이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기성 경제·정치 시스템에 경제적·정치적으로 도전해 그것을 뒤흔들려고 하지 않으면, 개혁을 제대로 얻어낼 수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 지배계급도 절박하고 강경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본회의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의미

추석 직전, 민주당과 야당들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해병대원 특검법만 벌써 세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도 두 번째다.

물론 이런 도돌이표 입법의 일차원인은 윤석열의 악랄한 버티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시키기에 몰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 동안 어떤 진전도 없었다. 올해 초여름이 돼서야 ‘특검법 통과 → 거부권 행사 → 장외 규탄 집회 → 재표결 부결’ 과정을 두 번 반복했다.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대중의 반감이 더 커졌지만, 거부권 행사를 한층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맞받아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대한 항의 운동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없다면 윤석열은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저,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이 다음 선거까지 지속되길 바라며 시간을 끌려 한다.

민주노총, 진보당·정의당 등과 주요 엔지오 등 개혁주의 지도부들의 의회 활동 중심주의(의회 협상과 입법으로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전략)가 여기에 일조했다.

그 전략에서는 대중 동원이 의회 책략에 비해 부수적 수단이 되고, 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심지어 몇몇 국힘 의원들에 의존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투쟁, 일본 핵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 등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9월 21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수만 명이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퇴진을 요구하는 약 70건의 시위를 벌였다.

7월 초 총선 이후 두 달간 이어진 교착 상태 끝에, 마크롱은 우익 중진 정치인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바르니에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텔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지가 있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이 누가 총리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고 프랑스 정부를 감독하게 된 것이다. 바르텔라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합 없이는 무엇 하나 이뤄질 수 없다.”

이번 토요일 시위는 장뤼크 멜랑송의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가 주최했다. LFI가 속한 선거연합 신민중전선(NPF)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과반 의석을 얻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신민중전선 측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했다.

멜랑송은 마르세유에서 열린 행진에 참가해 이렇게 연설했다. “이 정부는 패배자들의 연합입니다.” 이 시위 전 멜랑송은 지금이 “괴물들이 설치하는 시간”이라고 썼다. “역사의 쓰레기통이 굼주렸던 모양이다. 저물고 있는 세력의 지도부 아래로 패배자들이 뭉쳤다.”

분노

바르니에는 9월 21~22일 주말에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 명단은 바르니에가 속한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마크롱의 선

거연합인 EPR에 소속된 정치인들로 짜여 있을 것이다.[이 글이 발표된 이후인 22일(현지 시각), 공화당 정치인들이 장관직 다수를 차지하고 마크롱 측도 일부 주요 직책에 오른 명단이 발표됐다.]

이 정부의 목표는 긴축을 관철시키고 가뜰이나 이민자·무슬림에 적대적인 수많은 법률을 더한층 가혹하게 개악하는 것이다.

거론되는 내각 인선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있다. 예컨대 바르니에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로랑스 가르니에를 가족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분노가 쏟아졌다. 가르니에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반대했던 자다.

그러나 바르니에가 직면한 문제는 몇몇 장관직 인선보다 더 심각하다. 바르니에가 과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고 경제난을 더 끌 수도 없다. 바르니에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연합은 프랑스가 재정 준칙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인 시정 절차에 들어갔다.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 회장은 “마크롱 취임 이래로 추진해 온 공급 중시 정책의 유지를 보장하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구했다. 프랑스기업주들은 기업 감세, 정년 연장 개악, 실업수당 삭감, 이민자 마녀사냥을 바란다. 바르니에는 이를 이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언론에 유출된 바르니에의 예산안을 보면 핵심 서비스 예산을 최소 100억 유로(15조 원) 긴축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전쟁, 군 장성, 국내 억압 기구를 위한 예산은 증액할 것이다.

다음 달 바르니에는 자기 정부를 지지하도록 파시스트들을 구슬리는 동시에, 마크롱과의 동맹도 유지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합, 마크롱과 야합한 자들 중 일부는 언제든 바르니에를 버리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더한층의 정치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한 번은 바르니에의 통치력이 너무도 취약해 보인 나머지 그 자신이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한 번 더 도전해 보라고 바르니에를 설득했다.

무기한 총파업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쟁을 벌이는 것이 사활적이다. 프랑스 노총 CGT는 10월 1일 하루 파업·시위 일정을 잡았다. 이 행동은 지금 꼭 필요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는 면피성 행동 이상을 벌일 계획이 없다.

대중 동원이 시급하다. 국민연합을 저지할 방법이 되겠다던 선거 연합 신민중전선은 마크롱 지지자들의 당선을 도왔다. 그리고 그자들이 지금 파시스트들의 힘을 키워 주고 있다.

LFI는 의회에서 마크롱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이 탄핵을 막게끔 돼 있는 온갖 헌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탄핵이라는 초점은 운동이 의회 내 다름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9월 7일 마크롱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는 첫 번째 행동이 벌어져, 프랑스 전역 150여 개 도시에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21일 시위는 그보다 규모가 작았다.

마크롱에 맞서, 또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맞서 거리와 일터에서 항쟁을 벌일 때다. 프랑스령 식민지인 마르티니크와 카나키(누벨칼레도니) 모두에서 빈곤과 식민 통치에 맞서 새로운 투쟁의 물결이 일고 있다.

9월 10일 목요일 프랑스 경찰은 카나키에서 두 명의 남성을 사살했다. 프랑스가 카나키를 병합한 것을 기억하는 국경일을 고작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카나키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들의 연합체 FLNKS는 프랑스 경찰이 “야만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진압하다 이것이 “즉결 처형”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프랑스 정부의 유권자 등록법 개악으로 지난 5월에 소요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카나키인 13명이 살해당했다. 선주민 카나키인들은 유권자 등록법 개악이 독립을 향한 그들의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바르니에 정부는 취약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공세에 나서야 한다. 유럽 전역에서 파시스트들이 위기에서 득을 보며 성장하고 있다. 좌파가 너무 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이다. 긴축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투지를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찰리 김버

독일 반파시즘 활동가 인터뷰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을
여느 공당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파시스트들이 주도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9월 1일 튀링겐주 선거로 제1 당이 됐고, 9월 22일 브란덴부르크주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2위를 했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토마시 텅글리-에번스가 독일의 파시즘 반대 운동가이자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가비 앵겔하르트(아래 사진)에게 AfD가 성장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뒤섞인 당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이 정당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fD는 2013년 창당 당시 파시스트, 우익 보수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EU 회의론을 주된 기조로 삼는 자들이 대부분 지도부에서 밀려났고, 이후 AfD의 인종차별적 강령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당은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현재 튀링겐주 AfD 지도자인 비외른 회케가 당시 당내 파시스트 분파인 ‘플뤼겔’(‘날개’라는 뜻)을 이끌었습니다.

회케는 2022년 작센주 리자에서 열린 AfD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 당 공동대표 알리체 바이텔은 이전에는 회케를 축출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연합 탈퇴, 연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중핵을 거스르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파시스트들이 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기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동부의 튀링겐주와 작센주 선거에서 거둔 승리로 회케의 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잦아들었습니다. AfD는 아직 순수한 파시스트 정당은 아니지만, 이제 파시스트 성격이 지배적인 정당이 됐습니다.

AfD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직돼 있나요?

AfD는 당원이 약 4만 8000명이며, 그중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입당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fD는 국회의원 77명, 전국적으로 주 의회 의원 275명을 두고 있습니다. AfD 국회의원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 나치와 극우 ‘정체성주의 운동’ 활동가들을 보좌관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치들은 이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막후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제 AfD는 적어도 옛 동독 지역의 거의 모든 지방 의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역 당 조직을 구축하고 모임을 열며, 선거 운동 기간에는 거의 매일 책가판을 운영했습니다.

튀링겐주와 작센주에는 AfD에서 가장 우익적인 지역 당 조직들이 있는데, 평당원 중 나치 비율이 가장 높은 데다가 지도자들도 파시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작센주 켐니츠에서 일어난 파시스트들의 시위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아르투어 외스테를레는 현재 작센주 의회의 AfD 의원입니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는 가운데 파시스트와 반(反)파시즘 세력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fD 대표들이 노골적인 나치들과 ‘정체성주의 운동’의 대표자인 마르틴 젤너를 만나 이주민 대규모 추방을 모의한 사실이 폭로되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AfD도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AfD는 파시스트 거리 폭력배들과 관계가 있나요?

AfD는 우익 테러 집단의 의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치들이 거리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켐니츠에서 일어난 파시스트들의 인종차별적인 시위가 전환점이 됐습니다. AfD는 당시 처음으로 나치들과 함께 공공연하게 행진했고, 그 이



올해 1월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AfD 반대 시위

후로 여러 도시에서 매주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위 주제는 매년 바뀝니다. 코로나,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하며, 참가자 수도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의 핵심 목표는 파시스트 거리 운동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AfD는 여러 의회에서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연설을 하며 난민, 무슬림,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작센주의 바우첸이라는 도시에서는 약 700명의 나치들이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행진에 참가한 1000여 명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주최 측은 나치의 위협 때문에 행진 후로 예정된 파티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작센주 라이프치히에서도 나치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반파시즘 거리 동원 덕분에 저지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난민을 겨냥한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작센주에서 41건, 튀링겐주에서 35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AfD가 40~50퍼센트 득표율을 기록한 소도시와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치 강파 조직을 만들어(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색인종, 무슬림, 성소수자, 좌파

를 공격하는 운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에서 한 난민이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AfD는 자신들의 정당성이 더 입증됐다고 여겼고, 난민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9월 말 브란덴부르크주 선거를 계기로 공격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어떤 구실을 해 왔나요?

많은 이들이 연립정부에 정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연립정부는 사회적 궁핍을 완화하지 못했고, 부유층 증세는 감히 시도도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기존 군비에 더해 1000억 유로 [약 150조 원]를 재무장에 투입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졸링겐 칼부림 사건 이후 독일 좌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난민 신청 자격을 더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에 영합해서 AfD의 표를 가져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버터 맛 나는 마가린이 아니라 진짜 버터에 투표합니다.

독일 상황이 또다시 보내는 경고 파시스트가 수도권 주 선거에서 1위가 될 뻔하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9월 22일 또 다른 주 선거에서 1위를 할 뻔했다.

AfD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지극히 근소한 표차로 2위를 했다. 등록 유권자가 250만 명이고 투표율이 높았던 이 선거의 출구 조사에서 AfD는 29.2퍼센트, 시민당은 31.8퍼센트를 기록했다.

AfD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에워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의회를 장악하기를 몹시 바랐다. 이번에 AfD 득표율은 지난번 브란덴부르크주 선거 때보다 6.4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독일이 통일된 1990년 이래로 줄곧 브란덴부르크는 시민당이 장악해 왔다. 시민당 소속의 총리 올라프 슐츠와 시민당의 연정 파트너 녹색당에 소속된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도 이곳에 거주한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이 선거에서 시민당이 패배했다면, 그 패배는 집권 연정의 위기를 낳았을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브란덴부르크주 선거도 이달 초 그들이 1위를 거머쥔 튀링겐주 선거처럼 되기를 바랐다. AfD는 작센주에서도 아슬아슬하게 2위를 했다.

주류 언론은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환호성이나 듣고 있을 때가 아니다.

AfD는 악랄한 인종차별 정당이다. AfD는 국가가 “범죄자”인 이민자와 그 후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독일 국적의 “이민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나라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이다.

AfD는 경제 위기와, 인종차별에서 비롯하고 모든 주류 정당이 부추긴 이민자 위기에서 득을 보고 있다.

AfD 핵심부에는 조직된 나치가 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한 제3제국의 정책을 재현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AfD 고위 인사들이 노골적인 나치들과 극우 ‘정체성주의 운동’의 구성원들과 회동했다. 거기서 그들은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추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것이 폭로된 직후 수십만 명 규모의 반(反)파시즘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나치는 주류 정당들이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안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선거에서 당을 이끈 후보 한스-크리스토프 베른트는 2016년 극우 시위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머리색 짙은 젊은 남성 무리가 나타나거나 멀리서 얼떨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겠는가?”

당시 “공식 정치인”들은 베른트의 인종차별 발언에 분노를 표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정치인들은 이민자에 대한 베른트의 “우려”를 많은 부분 되풀이한다. 독일의 주류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의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입국 허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당은 나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그나마 표를 모을 수 있었다. 시민당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에 견줘 5퍼센트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시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고작 5퍼센트를 득표해 주의회에 간신히 입성할 수 있었다. 녹색당 득표율은 2.6퍼센트포인트 줄었다.

지난번에 7.6퍼센트였던 좌파당(디링케) 득표율은 3.1퍼센트에 불과했다.

한편, 좌파적 경제 정책과 우파적·인종차별적 신조를 결합한 정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은 12퍼센트를 득표했다.

좌파당 지도자였던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지난해 그 당을 탈당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좌파당이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을 외면하고 “기괴한 소수자들”의 정체성 정치를 지지하는 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정당하다”며, 자신의 당이 그런 우려를 대변할 것이라고 표방했다.

BSW의 공약 중에는 최저임금과 연금을 인상한다는 공약도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넷제로’ 조치를 중단하고 난민 관련 법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있다.

바겐크네히트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독일이 지도적 구실을 하는 것에 대해 커지는 우려에 호응해 득을 보려 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자 한다.

BSW의 모순된 정치는 나치를 이롭게 할 따름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강화하는 것은 AfD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핵심 차별점이다. 그런 정책들에 동조하는 정당이 많아질수록 논쟁 지형은 더한층 우경화될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 독일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분출했다.

이런 운동이 갈수록 거세지는 인종차별적 극우의 도전과 극우의 정책을 앞다퉈 차용하는 주류 정당들 모두에 맞설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사활적인 때다.

유리 프라사드

출처 Yuri Prasad, ‘Another warning from Germany: AfD fascists almost win Brandenburg election’ (2024. 9. 22) / 번역 김준호

노동조합 지도부가 시민당이 이끄는 정부를 ‘자신들의’ 정부로 여기고는 그 정부를 공격하려 하지 않는 탓에, 거리에서는 실질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전쟁에 맞서 싸우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25퍼센트가 AfD에 투표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우리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노조”라며 이 문제와 대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노조들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뤄서 이 문제에 대처하려 하지만, 인종차별과 파시즘 문제와 직접 대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일터에서 AfD와 나치에 맞설 의지를 가진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큰 과제입니다.

왜 AfD는 특히 독일 동부에서 성장하고 있나요?

AfD가 독일 동부에서 부상한 까닭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벌어진 일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독의 스탈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우리는 많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변영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탈산업화와 20퍼센트에 달하는 대량 실업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탈산업화에 반대하고 사회보장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졌지만, 독일 국가는 인종차별을 이용해 운동을 약화시켰습니다.

보수 정당인 기민련(CDU)이 이끄는 정부는 나라가 “이미 포화 상태라 동유럽 국가들에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주민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옛 동독 지역에는 이러한 인종차별이 번성할 토양이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동독의 스탈린주의 정권이 베트남, 모잠비크, 쿠바 등지에서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공장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를 잃자 살 곳도, 사회보장도 없어졌습니다. 스탈린주의 정권은 그들에게 경제 위기와 물자 부족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구 방망이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나치들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나치에 맞선 시위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에 시민당은 임금을 억제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 패키지인 ‘아젠다 2010’을 도입했습니다.

‘아젠다 2010’은 이미 실업률이 20퍼센트였던 독일 동부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한 돈을 모두

▶ 10면으로 이어짐

오늘날 반파시즘 공동전선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 8월 7일 영국의 파시스트들이 지역 공동체 곳곳에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하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파시스트들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이 있었다.

그날 시위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 종교 단체들, 노동당 당원들, 녹색당 당원들, 페미니스트 단체들, 아나키스트 단체들, NGO 들, 그 밖에 어떤 조직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개인들이 함께했다.

사람들은 파시스트 폭력배에 맞서 경찰이나 법원이 아니라 노동계급 사람들이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뜻을 모아 공동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가 영국 전역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한 것이다.

이것이 공동전선 전술의 사례다. 공동전선은 노동자들이(혁명적 노동자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 모두가) 특정한 구체적 목표를 위해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다.

8월 7일에 그 목표는 파시스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공동전선은 공공 서비스를 방어하거나 일자리 삭감에 맞서 싸울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동전선의 핵심 목표는 즉각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완벽한 의견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전선은 논쟁의 도가니가 될 때가 많다. 공동전선은 사상의



영국의 반파시즘 시위

통일이 아닌 노동계급을 방어하기 위한 실천의 통일이며, 이는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부상하는 우파에 맞선 자기 방어의 공동전선을 추동할 때가 많다. 공동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30년대 나치가 부상한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나치의 승리는 결코 불가피하지 않았고 저지될 수도 있었다.

당시 독일에는 당원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개혁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SPD)과 30만 당원의 극좌 조직인 공산당이 있었다.

그들은 나치를 저지할 능력이 있었다. 서로 힘을 합쳐 사람들을 거리로 동원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면 말이다. 그

리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독일 공산당에 촉구했던 일이다. 트로츠키는 파시즘에 맞서 사회민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라고 공산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독일 공산당은 그러기는커녕 사민당을 “사회파시스트”로, 즉 나치와 같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공산당은 사민당과 공동전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바랐다.

한편, 독일 사민당 지도자들은 독일 헌법의 “신성함”이 나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치에 맞선 공동 행동이 없었기에 나치는 좌파의 개혁주의 진영과 혁명적 진영 모두를 분쇄할 수 있었다.

과거 교훈을 오늘날에 적용하기

이를 교훈 삼아 오늘날 영국의 혁명가들은 파시스트 지도자인 토미 로빈슨에 맞서 싸우는 데에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좌파 국회의원들, 문화계 인사들을 동참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동전선은 혁명가들만 싸울 때보다 더 폭넓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혁명가들은 자신과 나란히 싸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다. 또한 공동전선 안에서 개혁주의적 주장과 혁명적 주장의 사상적 전투가 벌어지고 혁명가들은 일부 개혁주의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정치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1930년대에 트로츠키가 말한 공동전선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두 정당의 직접적 연합이었다. 오늘날의 공동전선은 더 다양한 조직들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더 폭넓지만 트로츠키가 묘사한 공동전선의 정신은 그대로 적용된다.

공동전선은 혁명가들이 다른 쟁점을 둘러싼 투쟁을 중단하거나, 공동전선 안으로 완전히 용해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동전선에 참여하는 세력들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혁명가들은 여전히 더 포괄적인 정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인종차별 반대는 공동전선은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다. 자본주의가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참상은 언제나 절망을 낳는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운 체제가 낳은 문제들을 이주민과 난민 탓으로 돌린다.

권력 핵심부가 부추기는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에서 겪는 절망은 파시즘의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인종차별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시즘이 우리를 제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단결해야만 한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What is the united front against fascism today?' (2024. 8. 16) / 번역 전문기

▶ 9면에서 이어짐

소진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 집을 잃거나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동안,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농촌은 버스도, 병원도, 상점도 없고 기반 시설이 극도로 열악합니다. 동부가 더 심하지만, 서부도 좋지 않습니다.

왜 좌파가 지지받지 못했나요?

2000년대 초 주로 옛 동독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좌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2007년 이 운동에서 좌파당이 탄생했고, 초기에는 지지받았습니다. 2009년 총선에서는 거의 12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처음에 좌파당은 변화 염원 대중의 희망과 열망을 대변했고, 전쟁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좌파당 내 일부 사람들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란 환상을 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이미 사민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비 정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 수준에서 사민당과 연정을 꾸린 곳에서는 독일의 여느 주 정부처럼 행동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좌파당은 공장과 상점을 멈추고 생명을 구하는 투쟁을 실질적으로 벌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당은 더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fD가 그 공백을 메우고 유일한 반전 정당이자 정부 정책에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파시스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AfD가 민주적으로 선출됐으므로 민주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AfD가 의회에서 직책을 맡으면 무능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용인될 만한 정치인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며 1930년대 나치가 부상할 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시스트들이 민주적 절차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민주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AfD가 여느 공당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면을 벗겨 파시스트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에 맞서는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하고 거리에서 그들에

맞서고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반파시즘 활동가들은 거리로 나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링겐주 예나에서는 2000명이 AfD 집회를 막아서 회계의 연설을 저지하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와 협력하여 AfD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에센에서는 AfD 전당대회를 저지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년 봄에 있을 다음 전당대회도 저지하려 합니다.

이미 많은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토마시 텡글라-에번스

출처 Gabi Engelhardt, "We must not normalise the AfD"—interview with German anti-fascist (2024. 9. 11) / 번역 김동욱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8월 초 시작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침공으로 1200제곱 킬로미터의 러시아 땅을 점령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 공격을 “엄청난 전술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 이번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쿠르스크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소기의 목적을 얼마간 달성한 듯하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은 또한 카타르가 중재하던 부분 휴전 협상을 무산시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 협상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했었다. 젤렌스키는 현재 전선에 근거해 협상이 진행돼, 러시아가 전쟁 초반부터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무기를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금기”를 완화시켰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은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군사 목표물만 공격하도록 허용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레드 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확산을 피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레드 라인”은 계속 바뀌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8월 27일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하리코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키이우[키예프: 여기서는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가리킴]는 서방 장비를 사용해 국경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군부대, 지휘 통제 센터 또는 병참 기지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국경 근처에 있는 러시아의 공격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몇몇 유럽 정부들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서방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시키고 싶어 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산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사 시설들을 [우크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전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나가] 무력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9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노동당 소속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만나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 스톱 쉘도우를 러시아 영내로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다음 날에 나토 군사위원장 롬바우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군사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자위권은] 자국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국산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여러 차례 타격했었다. 그러나 드론에 탑재하는 탄약의 정확도, 속도, 중량, 격추 방지 기능 등은 스톱 쉘도우 미사일(사거리 최대 250킬로미터)이나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사거리 500킬로미터)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서방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은 일부 유럽 정부와 젤렌스키의 요구에 회의적이다. 특히, 미국 권력자들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젤렌스키는 현재 미국을 방문해 지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스타머 같은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전쟁을 확대하려는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러시아도 섬뜩한 응수를 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렇게 말했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토 국가들은 …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셈이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 우리는 그에 걸맞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핵무기가

아닌 무기로도 키예프(키이우)를 파괴해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거대한 용광로

이렇듯,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는 확산 위험을 더 키울 뿐, 성공 가능성은 낮다.

먼저 군사적 측면을 보자.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서서히 몰아내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도시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병참 거점이다. 러시아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력 공급이 제한돼 동부 산업

지대의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정전이 반복되면서 주민 생업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매우 힘들고 어둡고 추울 듯하다.

9월 초 젤렌스키는 부총리·장관급 8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이었다. 젤렌스키는 소속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들이 “너무 지쳐서” “더는 산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방과의 협상을 맡아 온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의 경질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지 두 인접국 간의 전쟁이 아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세계 제2위의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이다.

물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대행자로 내세워 대리전 형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젤렌스키는 서방 강대국들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최대한 이용하려 애쓴다.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서방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젤렌스키의 끊임없는 불평이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소모전을 지속하기 위해) 젤렌스키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고 있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부상자 등은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의 긴장과 갈등, 충돌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김인식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9

미국 보잉 파업, 투지 발휘하며 2주째 지속

김준호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의 보잉 공장에서 노동자 약 3만 3000명이 2주째 파업을 하고 있다.

9월 13일(현지 시각), 국제기계항공 노동자연맹(IAM) 751지부 조합원 3만 3000명은 96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 노동자들은 보잉의 주력 상품인 '737 맥스'를 비롯해 여러 항공기와 부품을 생산한다.

파업이 2주째 접어들자 “보잉 항공기 신규 생산 대부분이 중단됐고, 파업 효과가 보잉의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 항공우주 분석가 론 엡스타인)

파업 노동자들의 분노는 대단하다. 노동자들은 지도부가 내놓은 합의안 ‘4년에 걸쳐 임금 25퍼센트 인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파업 돌입을 망설이던 지도부의 합의안은 94.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합의에 응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합원 제이크가 현지 언론에 전한 말이다. “소득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에요. 그 정도 인상으로는 집도 잃을 지경입니다.”

2013년 단체협약 이래로 10여 년 동안 보잉 노동자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억제돼 왔다. 반면 워싱턴주의 주택 가격 중간 값은 2013년 25만 3800달러(약 3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61만 3000달러(8억 2000만 원)로 뛰었다.

조합원들은 임금이 최소 40퍼센트는 인상돼야 하고, 지난 단체협약으로 줄어든 사측 연금 기여분(티어가 낮은 직원의 경우 연금 혜택을 아예 못 받기도 한다)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가족의 생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입사원·경력직·퇴직자 모두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 파업 조합원의 말이다.

고무적인 노동자 연대

조합원들은 “이길 때까지 버틴다”는 태세로 파켓라인(대체인력 투입 금지 시위) 유지·확대에 애쓰고 있다. “지난 석 달[교섭 기간] 동안 끼니를 거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아껴 가며 파업 기간 생활비를 모아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버틸 거예요.” 한 조합원이 <CNBC>에 전한 말이다.



수년간 물가 인상과 집값 상승을 감내해 온 보잉 노동자들. 40퍼센트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파업 노동자 가족들은 파켓라인을 유지하고 서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 급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무적이게도,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화물노동조합 팀스터의 조합원들은 파켓라인을 존중해 보잉 시애틀 공장의 화물 수송을 거부했다. “그 덕에 공장에서 보잉 737 반출이 막혔어요.” 파업 노동자 한 명이 현지 언론에 기쁘게 전한 말이다.

시애틀 항공 노동자들의 또 다른 노동조합 항공전문기술자협회(SPEEA) 2001 지부는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SPEEA 조합원들은 IAM 조합원들의 파켓라인에 지지 방문을 조직하고, 식료품과 지원금을 모으는 캠페인을 벌였다. SPEEA 지부장 존 디마는 “이번 투쟁에서 IAM이 승리하면 모든 항공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연대의 의미를 밝혔다.

지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보잉 노동자들에 지지를 보였다.

9월 20일에 ‘시애틀 팔레스타인 행동(SPA)’은 “제국주의적 공격에 무기를 대는 … 보잉의 탐욕이 노동자들과 지역에 끼치는 해악”을 규탄하고, 워싱턴주립대학교에 보잉 투자 철취를 요구하는 BDS 요구를 재확인했다. SPA는 10월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일정에 ‘보잉 대 민중’이라는 제목의 ‘티치인(옥외 강연 형식의 집회)’을 추가했다.

이런 연대는 노동자 파업이 다른 운동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보여 준다.

투쟁에 걸린 판돈이 크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하루빨리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히지만, 사측은 전혀 그럴 태세가 아니다. 사측 협상 담당자는 “피고용인의 생계비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고 대놓고 말했다.

9월 18일 교섭 결렬 직후, 사측은 파업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10월 1일부터 파업 노동자들을 직장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강경 대응은 보잉이 처한 위기의 반영이다. 올해 1월 737 맥스 항공기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뒤 보잉은 민수 부문에서 월평균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보잉의 숨통을 틔워 주는 한 요소는 전쟁과 학살이다. 보잉은 미국 방위 산업의 핵심 기업이자 세계 3위 군수 기업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전투기 추가 납품 계획을 발표하고 군수 부문에서 연일 초과 근무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군수 부문의 이익은 보잉 전체 이익의 작은 일부에 불과해, 경영난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더 옥죄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기를 쓰는 것이다.

한편, 파업 확대에 대한 우려가 미국 주류 언론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동부 항만의 국제항만노동자 노동조합(ILU) 조합원 약 4만 5000명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10월 1일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파업이 성사되면 미국 항만 노동자들은 1977년 이후 최초로 전국적 파업을 벌이게 된다.

<폴리티코>는 “보잉을 골치 아프게 하는 이 파업의 와중에 … 전국적 항만 파업이 벌어지면 미국 전역의 공급망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이 파업은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몇 달을 악몽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쟁 확대는 민주당의 악몽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투쟁이 확대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안정적 관리자를 자임하는 바이든-해리스의 민주당이 결코 바라지 않는 바다.

바이든(아직 대통령이다)은 교통부장관 피트 부티지지를 파견해 보잉 교섭을 중재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기업의 앞날에 도움 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부티지지의 개입은 사태 전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침묵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것이 “이번 파업으로 경제 공약의 색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난처함의 표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해리스는 구체적 내용은 없는 ‘밥상 물가’ 대책과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중산층 살리기’ 공약으로

▶ 13면으로 이어짐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1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팔연사’ 조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팔연사’ 집회와 활동의 특징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원어민 강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들과 운동 속에서 교류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이주민으로서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됐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공감하는 동료 노무사들과 함께 ‘팔연사’ 집회에서 무료 노동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흔히 난민 비자라고 알려져 있는 G-1 비자는 다양한 사유의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소송, 치료, 산재보상 청구나 임금 체불 진정, 난민 신청 등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중 난민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난민 비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G-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이 금지된다. 앞서 열거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 더러 손가락만 빨면서 결과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만약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미등록 신세가 된다. 취업하려면 출입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첫 6개월은 아예 취업이 불가하고, 이후 허가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나 업종이 제한된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다며 난민 신청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통상 6개월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맞물려 취업 허가도 갱신해야 한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출입국 당국의 허가 통보에 달려 있다.

A 씨는 난민 신청자다. 노동자 투쟁 지원과 반정부 활동에 대한 본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한국 법무부는 그의 난민 신청을 기각했고, A 씨는 현재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A 씨의 가족 전체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나는 A 씨의 퇴직금이 체불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대리인이 돼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

사용자가 A 씨를 대하는 태도는 한국인 사장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같았다. 취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등, 건강보험 등 가입이 불가능하니 공제금이 없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등,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증거가 없어 쉽지 않아 보였으나 사용자의 진술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확정 지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었다. 올해 4월 22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불 금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위한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이 중 하나가 건강보험 가입 이력인데, A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까지 제기해서 시간을 허비해 가며 법원의 간이대지급금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냈다. A 씨 가족에게는 적잖은 금액이어서 다행이지만,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이 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B 씨는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하며 만난 친구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취업한 그는 체류 기간이 끝나자 난민 신청을 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왔다. B 씨는 이주민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조차 없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나 체류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이주민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가짜 난민”으로 의심되면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는데, B 씨도 그런 사연이 있는 듯했다.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그의 삶조차 소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도 열심이었다.

그가 내 사무실에 찾아 왔다. 난민 불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을 앞두고였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지, 한국에서 더 일하면서 체류할 수 없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인 C 씨도 같은 처지여서 함께 왔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불가했고,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법적 체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들 처지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둘은 쓸쓸하게 사무실을 나갔다. 나에게 소송대리권이 있었다면 좋으련만.

안타까워 이주민·난민을 지원하는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답변은 놀라웠다.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무분별한” 난민 신청 때문에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진짜 난민”들에 대해서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3년 난민 인정률은 1.53퍼센트다! 정부는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가짜 난민”을 걸러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배척적 난민 심사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B 씨와 C 씨처럼 한국에서 더 체류하며 일하고자 하는 것이 비난받아야 하나? 힘든 시간을 버티며 적응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체류를 제한하는 국경 통제가 진정한 문제 아닐까? 아마 B 씨와 C 씨는 미등록 신세로 일하다가 단속되거나 길거리에서 단속돼 추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이라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다양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도 관심을 가지고 맞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국제적 정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주민 차별은 그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 12면에서 이어짐

포장해 내놓았다. 그런데 막상 생활고에 항의하는 노동자 파업에는 논평을 일절 거부하고 “피켓라인에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만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해리스가 진정으로 구매하는 대상은 생활고에 신음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아니라 대자본, 제국주의자들, 군 장성들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대변자를 참칭하던 도널드

트럼프는 “파업 노동자들을 모두 잘라 버리라”고 인터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이런 진절머리나는 선택지 중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투쟁 확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런 투쟁들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서로 연결되며 성장해야 선거 결과가 어떻게든 계속될 위기와 공격에 맞설 수 있다.



르노코리아 파업

생계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이형주 르노코리아 노동자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9월 13일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이후 23일(월)부터 본격 파업을 재개했다.

9월 3일 사측과 르노코리아자동차노조(이하 독립노조) 지도부는 기본급 7만 3000원 인상에 약 500만 원 수준의 일 시급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노조는 상급 단체가 없는 독립노조로, 대다수 노동자가 속한 교섭 대표 노조이다.

독립노조 지도부는 기본급 7만 3000원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1.5퍼센트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겪어 온 생활고를 회복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르노코리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7.6퍼센트 삭감됐다.

무엇보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심각하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부터 임금을 매년 10퍼센트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3~4년 차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독립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5년 뒤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1년간 임금피



실질임금 삭감, 54세부터 10퍼센트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8월 15일 투쟁 출정식

크제를 유예하고 2025년에 개선하도록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타협한 것이다.

잠정 합의안은 반대 64.8퍼센트로 부결됐다.

그래서 독립노조 지도부는 투쟁 수위를 높였다. 조합원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파업인 것이다.

전면파업에 돌입한 9월 13일, 사측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르노코리아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전 차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생산 마비 효과가 크다.

그래서 사측은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하면 매번 직장폐쇄로 파업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파업 불참자와 대체인력을 1교대조로 모아 공장을 절반이라

도 가동하려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다. 사측의 협박에 응한 노동자가 많지 않았다.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노동자 900명 가량이 독립노조 사무실 앞으로 집결했다. 파업 이탈자가 거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집결했다. 상당히 고무적인 집회였다.

신차가 연이어 출시되는 시기라 파업이 효과적으로 벌어진다면 사측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 사측은 계약직 노동자와 관리자를 총동원해 생산을 가동했다. 당장에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낮아 정상적인 생산은 힘들 것이다. 실제로 23일에 사측의 노력에도 생산량은 평소의 4분의

1 가량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파업이 위축될 수 있다.

독립노조 위원장은 최근 단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투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사측이 대체인력을 동원해 생산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단식투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

투쟁이 승리하려면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피케팅 등 적극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파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직장폐쇄에 맞서 공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공장 점거 전술을 사용했다. 노동자들이 연좌하고 생산 시설을 통제하면, 사측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물론, 사측과 보수 언론은 ‘불법’이라며 공장 점거파업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파업 파괴 행위야말로 부당하다. 그리고 점거 농성장은 연대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르노코리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더 많은 연대가 모여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르노코리아의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 전문은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생계비 보장 요구 정당하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최저 운임 보장을 요구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2023년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한 조사를 보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9시간(주 5일로 보면 하루 10시간), 이동을 위한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뺀 평균임금은 175만 원이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를 적용해 계산하면 시급은 4250원에 불과했다.

최근 내수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대리운전 콜은 과거에

비해 20~30퍼센트 감소했다. 저가콜(소위 “퐁콜”)도 늘어났다.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면 더 빨리 더 오래 일해야 하는데, 이는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9월 2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서 쟁의 행위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긴 기업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 기사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는데, 고용주인 카카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심야 노동과 과로, 그리고 빨리 고객에게 가라고 등떠미는 정책으로 대리 기사는 전통 이동장치를 이용

하다가 길 위에서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대리운전노조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건당 기본운임을 최저 1만 2000원으로 하고, 구간별 운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대리운전 요금 담합”으로 공정위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이다. 운임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임금이며 생계비이다.

사측이 운임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

실 이윤은 손톱 만큼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탐욕의 발로일 뿐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중계 수수료는 2.8퍼센트인 반면, 대리운전 수수료는 무려 20퍼센트나 된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퍼센트, 영업이익은 99퍼센트 늘어났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운임(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

대리운전노조에서는 얼마 전 카카오모빌리티에 맞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1~12월에 연말 성수기 파업을 포함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선영

※ 전문은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8년 만의 어머니 상봉 가로막은 비정한 한국 정부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A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려고 인천 공항까지 왔다가, 출입국 당국의 입국 불허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집트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씨의 어머니는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고, 귀국 항공편까지 예매해서 지난 9월 16일 한국에 왔다. 무려 8년 만에 모자가 상봉할 기회였다.

그런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됐다. A 씨의 어머니가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가족임을 파악하고는, 그녀도 난민 신청을 할까 봐 입국을 막은 것이다.

A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 직원이 어머니에게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인 제 이름을 말했죠. 그러자 출입국 직원이 전산망 검색으로 제가 난민 신청자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어머니에게 ‘당신도 난민 신청하러 온 거 아니냐’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난민 신청하러 온 게 아니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딱 하루만”

“입국이 거부되자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울음 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울어 봤자 아들 볼 수 없다.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만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권이 만료돼서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수가 없다. 가더라도 체포될 수 있다’고 항변하자, 그 직원은 나에게 ‘그건 당신 문제니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딱 하루만 아들을 보게 해주면 바로 출국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열악한 출국 대기실 A 씨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직원의 고압적 태도에 시달렸다

출입국 직원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난민 신청을 할 생각이셨으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면 한국 이곳저곳을 관광시켜 드리려고 돈도 모아 뒀습니다. 어머니가 묵을 숙소와 관광 계획을 정리해 출입국 당국에 제출했는데도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A 씨의 어머니에게 예약한 호텔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 하고는, 어머니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자 (아랍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이것도 입국 불허 사유로 삼았다고 한다.

호텔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으며 관광이 아니라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통지서에 어머니가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출입국 당국은 통지서를 도로 회수해 갔다. 어머니가 통지서에서 ‘24시간 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의했으나, 출입국 직원은 ‘그런 내용 안 적혀 있다’며 통지서를 빼앗아가 버렸다고 한다.

입국이 거부된 A 씨 어머니는 출국 대기실로 보내졌다. 출국 대기실은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출입국 직원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여기서도 이어졌다.

“출국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자 출입국 직원은 울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전화로 듣고 있던 제가 항의하니 그 직원은 ‘난 난민 신청자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라고 말했고, 제가 한국어로 직원한테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 ‘뭐라구요? 뭐라구요?’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산가족

A 씨는 어머니를 입국시킬 방안을 알아봤다. 항공사 직원은 소송을 해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3주는 걸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게다가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백만 원이 필요했다.

결국 안타깝게도 A 씨 어머니는 이틀만인 9월 18일 입국을 포기하고 이집트행 항공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이 A 씨에게는 한국에 온 가족조차 만나기 힘든 난민의 비통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사실 어머니가 A 씨를 만나기 위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A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집트 내무부가 ‘국가 전복을 시도한 불법 단체에 가담한 청년들을 체포했다’고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잘 알려진 사건에 연루돼, 이집트 내에서도 도피 생활을 하느라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집트 보안 당국은 제가 해외로 도피해 있다고 의심합니다. 제 동생이 국가보안부에 끌려가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인 채로 취조당한 적도 있습니다. 형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며 말이죠.

“어머니가 이번에 출국하려고 할 때도, 보안 당국은 ‘아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며 출국을 허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로한 여성이 계속 울고 앉아 있으니까 담당 보안 장교가 눈감아 줘서 겨우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이 거부돼 이집트로 돌아간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갔었다는 사실이 들끓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당국에 ‘호텔 이름을 못 대서 입국이 거절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리라는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A 씨 역시 유대가 끈끈했던 가족들을 8년 동안 상봉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적과 종교가 뭐든 전 세계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특히 어머니를 못 만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한국 정부는 난민 가족에게 애초 비자를 내 주지 않거나, 심지어 이번 사건처럼 비자를 내 주고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입국을 가로막곤 한다. 이런 비인간적인 조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터뷰·정리 임준형, 통역 박이랑

▶ 16면에서 이어짐

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절박한 필요로 한국에 온다. 한국행이 막히면 그들은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아예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행을 막는다고 그들이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거나 그 수급 조절에 자신들이 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경쟁자로

여기는 정서를 부추기고 단결을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모두의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환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